친명 "대표 사퇴론 잦아들어…당내 기류 대동단결 투쟁으로"

정청래 "사퇴 요구는 별무소용"
"검찰 가혹수사 없었는지 밝혀야"
이상민 "李 대표 선당후사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 사망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친명계의 분석이 나왔다.

이같이 친명계는 일각의 '이재명 사퇴론'을 일축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당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당내 비명계 반발이 커지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많이 잦아들었다"며 "이 대표 물러나라는 움직임이 살짝 있었나 본데, 별무소용으로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낙연 대표 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다"며 "당 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임기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붕괴하는 게 아니다. 당 대표만 그만두면 당 대표만 원포인트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다"며 "지도부가 와해하거나 붕괴하지도 않고 비대위도 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 대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원포인트로 (당 대표만 뽑는)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다"며 "그만두라고 한 분들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비명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게 별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거취에 대해 "늦여름에서 초가을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하라'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6개월 정도 되면 민주당 내 문제가 다 수습이 될 거라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차원"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이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혹하거나 무리한 수사, 압박 수사, 나쁜 수사가 없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친명 성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잦아들고 있다. 현재는 백해무익하다"며 "심기일전, 대동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바뀌고 있다"고 당내 기류를 진단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소식을 전하며 "문 전 대통령도 '대안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측근 사망 사건에 '검찰 탓이지 왜 이재명 탓이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도리"라며 "그런 부분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에 검은 그림자, 먹구름이 밀려오는 상황"이라며 "당직이라는 게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풀어야 할 몫인데 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당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선당후私사의 정신으로 그런 자세를 보여야 진정한 리더십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尹정부,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

강제동원 해법 연일 맹폭
한일회담 '4대 요구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틀 뒤 한일 정상회담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를 골자로 한 '4대 요구안'을 관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며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소한 다음의 4가지는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무분별한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 '4대 요구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원내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다.

아울러 주말인 18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SNS에 달랑 한줄…국힘 김재원, 5·18 망언 '면피용 사과'

대통령실 비판에 마지못해 "죄송"
野·지역정치권 진정한 사죄 요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5·18 정신 헌법의 전문 게재를 반대한다는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의 사과는 대통령실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힘에 따라 뒤늦게 이뤄진데다 SNS에 짤막하게 사과한다는 입장문만 올려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면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그냥 전라도에 립 서비스 한 것이지"라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까지 발언 배경에 대해 "개인 의견이다. 지금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힌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비판에 나서자 결국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정치인 한 명의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그간 노력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을 폄훼하고 조롱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고 정의당도 "여당 최고위원이 극우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강력 반발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발언'을 '망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김 최고위원의 망언은 국민의힘이 5·18 정신 계승에는 관심이 없고, 광주와 호남을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증명"이라며 "당직을 박탈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긴급성명을 통해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을 무시하고 망발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는 자는 즉각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라는 점에서 면피용 사과보다는 보다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김 최고위원의 한 줄 사과 입장문으로 어물쩍 넘어가기 보다는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잘못된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북한 개입 발언 등에 대해 "지난해 5월 12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북한군 침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등은 과거 침투 사례와 전술·장비 등 고려 시 비현실적인 주장인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진행중이고 그 결과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 짓게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